

#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 立春 무렵

그리운 님  
오실 듯이  
부끄러운 설산(雪山)에는  
지난 가을  
벼꼭새가  
둥지를 떠난 후에  
눈보라  
벼 속 저리는  
홍살문을 세웠다

산수유  
절기 틀어  
산월(産月)을 맞는 아침  
지심(地心)  
깊숙한 곳  
혼백을 불러모아  
하늘과  
땅의 합창 소리  
봄을 여는 초혼(草魂)들



최진섭

- 현 충청북도의회 부의장
- 청주시 복지환경·의회사무국장 역임
- 행우문화회장, 충북시조문학회장 역임
- 한국·청주문인협회 회원

## Contents

### Cover Story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충청권 3개 시·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 400여명이 지난 2월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조성 백지화 시도 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회 중 김형근 의장이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04 긴급현안

- 도의회,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앞장'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무엇인가?
- 충청권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

#### 09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 10 구제역 방역활동

#### 12 상임위원회 활동

#### 18 임시회 주요안건

#### 20 도정질문·답변

#### 21 5분 자유발언

#### 22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 24 의정활동 이모저모

#### 27 생활상식

-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상식

#### 30 의정일기

#### 31 무상급식



긴급현안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 “세종시 지켰듯이 과학벨트도 지켜내자” 도의회, 과학벨트 충청권



충청북도의회(의장 김형근)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사수를 위한 도민 운동에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대통령과 정부가 과학벨트 공약 폐기 움직임을 보인 초기 단계부터 적극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민 운동을 점화시키고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새로운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 명절 앞둔 지난 2월 1일 방송좌담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백지화 망언을 하자 도의회는 곧바로 철회를 촉구하면서 충청권 사수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다.

김형근 의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통령이 대선 때 대덕특구와 세종시, 오송·오창을 연결하는 과학벨트 조성을 공약했고 충북도 방문 때도 도민에게 약속했다”면서 “제2의 세종시 사태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9일에는 도청 신관 앞에서 충북도의회 결의대회를 개최해 대통령의 백지화 발언 철회를 촉구하고 과학벨트 사수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충북도의회는 10일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총괄할 「민·관·정·의회 연석회의」구성을 제안했고,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정상추진 충북비상대책위원회와

## 충청북도의회,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주요 활동일지

- 1월 17일 충청권 3개 시·도의회의장, 공동 합의문 채택 - 과학벨트 공모 선정시도 중단 및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 지정·고시 요구
- 1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충청권추진협의회 발대(충북도청)
- 2월 1일 이명박 대통령 방송좌담에서 과학벨트 입지 재검토 발언
- 7일 김형근 의장,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백지화 발언 철회 촉구 기자회견
- 9일 충청북도의회,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결의대회(도의회 앞)
- 10일 충청북도의회, 세종시 비대위와 공동으로 민·관·정 의회 연석회의 제안 기자회견
- 14일 충청북도의회, 충청권사수를 위한 충북 민·관·정 의회 연석회의 주관
- 15일 충청권 3개 시도 광역·기초의회 의원,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백지화 시도 저지 결의대회 (국회의사당 앞)

# 사수 '앞장'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시중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오제세 국회의원, 유철웅 회장 등 세종시 정상추진 충북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연철흠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회장 등 각계 대표 35명이 참여했으며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도민 역량결집과 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에 합의했다.

또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청와대와 정부 항의방문, 서명운동, 충청권 모든 대학·청주시·각 민간사회단체 참여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충청북도의회를 비롯한 충청권 3개시·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의원 400여명은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조성 백지화 시도 저지'와 '500만 충청인과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는 3월 16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범 충청권 권기대회'에 참여를 비롯해 충청권 지방의회, 주민, 각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과 연대해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사수 충청북도의회 결의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2008년 7월 대통령 당선 후 우리도를 방문하였을 때도 확인했고 2009년 2월 우리도 도정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재차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방송좌담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공약집에도 없고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한 말이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소모적인 지역간 경쟁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성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간 갈등과 국론 분열의 원인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전국 공모선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충청도민에게 약속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를 지정·고시하라!**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특정지역에 조성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11년 2월 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긴급현안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무엇인가?

# 과학과 비즈니스 융합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과학벨트  
개요

7년간 3조 5487억원 투입, 기초과학 육성  
세종시 거점으로 충청권 C벨트 구축 계획

과학벨트는 2009년 1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으며 2009~2015년까지 7년간 총 3조 5487억원이 투자된다.

기초과학의 획기적인 진흥을 통한 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으로 미래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이다. 이같은 국가비전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세종시를 벨트 거점으로 충청권 C벨트(대덕, 오송, 오창)와 전국 과학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K벨트(서울, 광주, 강릉, 대구, 부산)를 구축해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벨트의 거점지구를 세종시로 명시했으며 대학, 연구소, 기업, 금융의 4가지 핵심기능을 집적시켜 네트워크화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내의 벨트핵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첨단융복합센터로 구성되는 세종국제과학원이 설립된다. 대덕, 오송, 오창은 기능지구로 C(Center)벨트를 구성해 세종시와 충청권의 주요 과학산업 거점을 연계하게 된다. C벨트의 성장이 확장되면 경제발전 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돼 K벨트를 형성하게 된다.



과학벨트  
경제효과조성 지역에 매년 6만8천명 고용 창출  
연간 10조 6천억원 생산유발 효과 기대

7년간 총 3조 5487억원이 투자되는 과학벨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벨트 종합계획안에서는 고용창출 효과로 기초과학연구원, 국제과학대학원 등에 3,800명의 인력이 고용될 예정이고 첨단지식산업단지에는 1만 6천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효과로는 전체 국민경제에서 20년간 212만 2천명(연평균, 10만 6천명/ 10~29년)의 고용창출 효과와 235조9천억원(연평균 11조 8천억원/10~29년)의 생산유발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과학벨트 조성 해당지역 경제에서는 136만 1천명(연평균 6만 8천명)의 고용과 212조 7천억원(연평균 10조 6천

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09년 7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과학벨트가 C벨트(세종시, 대덕, 오송, 오창) 성장을 바탕으로 K벨트를 형성하여 전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 긴급현안

과학벨트  
충청권 시수

## 대통령 공약 어떻게 뒤집혔나?

## 특별법 날치기 처리 뒤 대통령 백지화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충청권을 찾을 때마다 과학벨트 조성을 약속했고 11월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격으로 명품 세종시 건설과 충청권 과학벨트 조성을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곧바로 3대 공약과제 중 과학기술분야 과제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은 이어졌다. 2008년 7월 충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과학벨트는 충청권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과학벨트 계획은 2009년 1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됐으나 정부와 한나라당내 친이계는 2009년 세종시의 9부2처2청 이전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논리로 교육·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제시했다.

세종시+과학벨트가 교육+과학벨트로(세종시 수정안+

과학벨트) 바뀌었으나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됐다. 2010년 1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세종시를 거점지구, 대덕·오송·오창을 기능지구로 명시한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2010년 12월 예산안과 함께 과학벨트 특별법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의결했는데, 통과된 특별법에는 그동안 전제됐던 충청권 조성을 명시하지 않아 충청권의 의구심을 키웠다.

올해 들어 지난 1월초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대덕특구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이 과학벨트 후보지이며 공약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권력 핵심부의 의중을 드러냈고,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2월 1일 방송좌담회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 백지화 발언을 했다.

## 긴급현안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충청권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

# 연구인력 집적 · 연계개발 ‘최적지’

과학벨트의 입지는 정치적인 선택과 객관적인 입지조건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당초 계획된 충청권이 최적지로 평가된다. 정치적인 선택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으로 뒷받침 된다.

객관적인 입지조건은 이미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중합계획안에 제시돼 있고 세종시가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을 최적지로 평가한 이유는 세종시는 도시기반 계획이 완성되어 있어서 기초과학 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가칭)국제과학대학원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음 인근의 대덕연구개발 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연계 발전시키기 좋으며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함 전국에서 2시간 내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국 주요 도시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연계발전이 우수

함 이라고 명시했다.

과학벨트 특별법(제9조)에서도 입지 기준으로 ①연구 · 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 ②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③국내외 접근 용이성 ④부지확보의 용이성 ⑤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이온가속기 등과 같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용수, 전력, 암반 등의 물리적 조건도 필요하다.

충청권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세종시-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생명과학단지)-오창-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클러스터 최적지이며 △기초과학 · 응용과학 · R&D 시설과의 연계 운용효과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집적도 △관련 산업과의 네트워크 효과가 높은 점에서 과학벨트 최적지로 손꼽힌다.

## 충북에 예상되는 파급효과

# 기초연구성과 사업화로 지역발전 촉진

교과부의 계획안대로 추진되면 세종시는 행정중심에서 과학과 비즈니스 기반을 함께 구축하게 되며, 이는 충북의 산업 활성화와 연결될 것이다. 또 연결도로망 등의 인프라 구축과 오송역세권 개발 촉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도 기대된다.

특히 기능지구가 되는 오송 · 오창은 거점지구인 세종시의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연구성과 사업화와 관련된 기업체와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원천기술 집적화에 따른 바이오밸리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

게 될 것이다. 즉, 오송 · 오창이 거점지구 배후지역으로서 생명과학과 첨단의료분야의 중추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다.

기초과학분야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오창의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도내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과학연구원 분소기능을 수행하게 돼 지역대학의 연구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국내외 내방객이 늘어나면서 상업과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도의회, 건의문 채택해 정부·국회 등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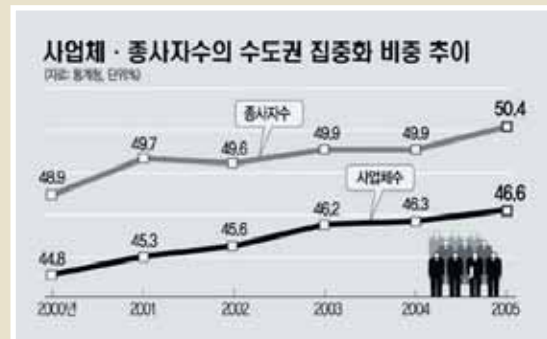
##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관리’ 정책 촉구

정부가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의회가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 기조의 즉각적인 중단과 적극적인 선(先)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월 27일 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에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도의회는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담은 연구용역을 완료했다”며 “연구용역 내용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추진해 지방과 극심한 마찰을 빚었던 제1차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위성 주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는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 확대 허용 등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야기됐고 인



구, 기업, 문화 등 사회 전부분에서 수도권 집중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관리기조’를 유지하여 비수도권이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

국토해양부가 최근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담은 연구용역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충청북도의회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관

리기조’를 유지하여 비수도권이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157만 도민과 도의회 의원 모두는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 기조를 즉각 중단하고 적극적인 선(先)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 구제역 재난 극복에 모두가 '한마음'

도의원들도 현장에서 방역활동·대책 협의

## 질병관리·보상대책·축산업 육성 등 대안 강구

국가적인 재앙인 구제역 방역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도 재난 극복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충북도 대책본부와 함께 방역대책을 협의한데 이어 구제역이 확산되기 시작한 1월 초부터는 방역과 살처분에 지쳐 있는 시·군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방역전선에 나가 직접 방역활동을 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구제역 발병 초기단계부터 도와 대책을 협의해 방역을 추진했다.

또 청주·청원 도의원 17명은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청주시 주중동 바이오엑스포장, 청원IC, 청주역 앞 초소에서 매일 구제역방역에 나섰고 다른 시·군지역 도의원들은 해당 지역구에 설치돼 있는 초소에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도 촉구했다.

도 산하 장학재단인 충북인재양성재단과 협의 「희망 장학금」예산을 늘려 1억원을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대책도 논의했다.

도의회는 현 단계에서 집행부와 함께 구제역 방역과 종식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이후에 향후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도의회는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 관리·예방 시스템 △구제역 방역상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가축 매몰지역에 대한 2차 오염 예방대책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업 육성 대책 등 분야별로 대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김형근 의장이 청원군옥산 방역초소에서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다.



▲ 장선배 의원이 청원IC 구제역 초소에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 하재성 의원이 청주시 주중동 구제역 초소에서 차량을 통제 하고 있다.

# “이제부터는 매몰지 2차 환경오염 예방”

## 도의회, 227개 매몰지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 요구

구제역에 이어 살처분 가축 매몰지역의 2차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집행부에 도내 227개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 충북도는 물론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환경오염을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월 18일 열린 제 297회 임시회서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가축 매몰지역과 주변의 식수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고 철저한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산업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

이다. 또한 도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가축매몰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 확대를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충북도는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단장으로 사후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가축매몰지 전수검사를 실시해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 매 분기별로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스관, 유공관, 축사 등에 탈취제를 수시로 살포하는 등 매몰지 악취저감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몰지 주변 3km 이내 지역에는 상수도를 보급할 방침으로 1293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매몰지 반경 5백m 이내 지역에는 6월말 이전에 상수도가 공급 되도록 할 계획이다.



청원권 오창1.C 방역초소를 방문한 김형근 의장, 박문희, 김봉희 위원장이 관계 공무원과 방역 관계자를 격려하고 구제역 유입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비전과 전략목표 협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문희 의원)는 제297회 임시회 회기 중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해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결정 변경 협의의 건」과 「제298회 임시회 의사결정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제297회 제1차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및 전체의원 연찬회 개최 등을 반영한 의장의 의사결정 변경협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운영위는 매 회기 때마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해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임시회에도 이를 반영기로 했다.

또한 1차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의회사무처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등 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주요계획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의회 위상 강화 △집행부 견제 효율화 방안 △소통과 도민참여 활성화 △의사개선 및 현장의회 실현 △공

부하는 의회상 구현 등 지난해 9대의회가 설정한 5대 운영과제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처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보좌 능력 향상,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언론매체와 인터넷 및 영상물을 통한 홍보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더 큰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1월 27일에 개최된 제2차 위원회에서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해 3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열기로 했다. 제298회 임시회시 도정질문에 따른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3월 8일에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 충북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의결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소관 5개 기관을 비롯한 출자·출연 5개 기관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한편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충청북도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더 많은 예산 확보를 당부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금년도에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예산이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예산조기집행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개선의지에 따른 대책 강구는 물론, 도민 참여예산제가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도정 주요정책들이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져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서는 충주의료원이 2009년도 도의 종합감사 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 이사회 보고조차 하지 않고 관련 간부직원에게도 아무런 신분상 조치도 하지 않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집중 추궁 하였으며, 충북학사 입사생 선발 시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주는 제도 도입과 입사생에게 연 1회 정도 부모님께 편지를 쓰도록 하는 시책 검토를 주문하였다.

또한,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특히,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은 충북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70명의 자문단과 공공혁신분과 위원회 등 5개 분과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두도록 수정 의결하여 도정자문단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주문하였다.

## 행정문화위원회

# 동계체전 선수단 격려 등 현장 활동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는 지난 2011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충청북도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또한, 충청북도 체육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주요현황 및 지원요청사항을 청취하고,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전시체험관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1월 18일(화), 제1차 회의에서는 공보관실,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의 방향성이 도민과의 소통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따졌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적절한 예산 배분과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1월 21일(금), 제2차 회의에서는 문화여성환경국, 자치연수원,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부서에서 농촌노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청남대 관광자원 활성화, 문화재단 창단 등 주요현안에 있어 열린 소통을 통한 여론수렴을 강조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인 충청북도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하여 사업현황과 사업집행의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고, 체육 사업이 도민들의 자긍심 및 건강권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각 기관 및 관련 행정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고의 인기를 얻은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전시체험관을 방문하여 전시체험관 기획 및 서비스 전반을 꼼꼼히 살폈으며, 창의적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충북지역 관광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각 시·군의 구제역 방역 초소를 방문하여 혹한 속에서도 곳곳하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농민들을 격려했다. 또, 동계체전에 출전한 충북선수단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 구제역 피해 농가에 조속한 보상 주문



토끼의 해 신묘년을 맞아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봉회) 위원들은 도민 모두가 번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며 지난 1월 임시회를 맞았다.

먼저 1월 20일 오전에 실시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LNG조기공급·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서민들에게 도시가스가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각 시군별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주문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해 지역특화형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정국 업무보고에서는 구제역으로 도내 소 5천마리와 돼지 16만 5천마리 등 17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구제역 감염이나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매몰되어 축산농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축산물 가격 폭등으로 서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한 방역과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제역에 의한 가축 매몰지가 53여 곳으로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및 토양오염이 심각히 우려되는 바 향후 사후관리 철저 및 친환경적 매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매몰 규정 준수를 주문했다.

이와함께,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살처분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와 축산농가 안정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1월 21일에는 4개 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대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대민원 서비스 제고와 대출 신청시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적극 협조를 통한 개선방향을 모색할 것과, FTA체결에 따른 도내 우수 상품을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 객관적인 지역 균형발전 사업 선정 요구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는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는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도민들이 체감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총체적으로 되짚어 보고, 2012~2016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략 수립 시에는 향후 5년간 재원이 배분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객관적인 선정기준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용도지역을 2종의 주거지역에서 1종으로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고도제한, 아파트 건설 불가 등 새로운 제약조건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지역의 특성과 예측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보은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차질없는 추진과 실거재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감정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보상대책을 요구했다.

교통연수원 보고에서는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시·군별 현지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수요자중심의 교육운영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특히,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타운 건립사업의 민자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장학생의 자격, 추천 기준과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교육위원회

## 학생 감염병 예방대책 적극 추진 요청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는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심사했다.

지난 1월 20일 실시된 제1차 교육위원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계획과 앞으로의 업무추진방향을 확인하고, 교육청이 도민의 염원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국가적인 재난인 구제역 사태와 관련하여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별로 구제역 초소근무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옥산 인근에 인수감염이 우려되는 AI 의심 정황과 신종플루에 대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1월 21일 실시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심사했다.

이번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무료화하여 응시생의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도민에게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조례로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 직속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그리고,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교습시간 제한에 따라 고액 비밀과외와 학원 운영의 위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과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학원, 교습소, 교육청 등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 충청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
- 자활기금의 용도 지정
- 자활자금 융자대여 한도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명을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 목적에 학교 등에 무상급식 필요 경비 지원을 추가



##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
-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0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추진기구로서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소방방재청의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 안 반영
- 교육훈련, 출동수당, 재해보상 지급범위 명확화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학교 신설, 교명변경, 학교 폐지, 학교 주소변경 등

##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목「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를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변경함
- 충청북도 노사민정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학생의 자격기준과 추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장학생 선발 정원을 대원의 100분의 5 이내로 정비함
- 공납금의 지급 범위를 명확화 하고 지급금액 조정함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회계직 공무원 및 위원 명칭에 대해 직위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변경
-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 삭제 및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를 신설함

### 충청북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안 제6조제1항제2호 다목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 초과와 분양가 인하율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며, 감면범위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며, 감면기간은 2011년 4월 30일까지로 함.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학생교육문화원 사용료 징수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 기능 : 충청북도의 장기발전 방향,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
- 자문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국적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





도 정 질 문 · 답 변

박문희 의원(산업경제위원회)



## 구제역으로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 대책은

**Q** 지난 2일 방송된 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매몰한 지역 인근에서 피가 섞인 침출수가 계곡으로 흘러들었고, 이를 끌어다 쓰는 지하수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 구제역 매몰에 따른 2차 오염이 향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환경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가축을 살처분하여 매몰할 때에는 콘크리트로 확실하게 둘러쳐서 2차 오염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과 예산문제로 인해 비닐로만 둘러싸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동물의 발톱 등에 의해 비닐이 찢겨져 찢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농촌지역의 농가 대부분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구제역 발생이 전국적 현상으로 100만 마리 이상 매몰된 현실을 볼 때 농촌의 식수 또는 지하수오염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우선, 식수대책으로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인근 주민에게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13개 지구 212km의 수도관매설 사업비 310억원을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지원을 받아 금년도 3월말까지는 현지조사·측량 및 급수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5월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금년도 7월말까지는 수도관 매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는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인근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오염대책으로 매몰한 날로부터 6개월간은 월 1회, 이후에는 분기별로 1회씩 3년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저류조에서 모인 침출수는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고 바이러스가 양성일 경우 톱밥처리 후 매몰지에 재 매몰하고, 음성으로 판명된 경우 폐수 처리하겠습니다.

## 구제역으로 5일장 폐쇄, 상인 지원책 없나

**Q** 구제역으로 인하여 시골단위 5일장이 전부 폐쇄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주 영세한 상인들입니다. 보따리 싸 가지고 봉고차에다 싣고 시장을 다니면서 그날 팔아서 그날 먹고 사는데 그들에 대한 도의 지원 대책은?

**A** 그분들의 피해까지 저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구정이 임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과 관련 단체가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의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적극 매입한다거나 자매결연 기관·단체·언론사 등에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지원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면 중앙에다 이러한 사항을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첨단 친환경 축산단지 건립 검토해 달라

우리 충청북도는 솔라밸리라고 하는 태양광의 최첨단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이 영상 18도가 넘어가면 잘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도를 맞추어 줄 수 있는 솔라밸리,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온도를 맞추는 그러한 최첨단 축산단지를 건립함으로써 엄청난 경제 손실이 오는 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또 구제역 가축 축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지방재정 조기집행 중단해야”

장선배 의원(정책복지위원회)



2009년과 2010년도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4천638억원 인데 이중 2009년도에 1천801억원, 2010년도에 473억원 등 전체의 50%가 2년 동안 발행된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확대뿐만 아니라 막무 가내식 조기집행이 지방재정 악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충북도는 2009년도 중앙에서 정한 조기집행 목표를 115% 달성했고, 도내 12개 시·군도 모두 초과달성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충북도가 목표액의 111%를 조기집행 하였으며 12개 시·군도 초과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자치단체 금고는 텅 비어 이자수입이 대폭 줄어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도의 경우, 금고 평균잔액 감소로 2009년 65억원, 2010년 15억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인해 외지업체 수주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일거리 부족 등으로 오히려 지역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와 자재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가격 인상도 유발됩니다.

또 부실설계, 감독소홀, 부실시공 가능성도 커집니다. 물품의 일괄구매로 인한 관리부실, 과다 구매 등 낭비 또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조기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과 폐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고육지책으로,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이 아닐뿐더러,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오히려 지역경기를 악화시키는 충북도와 시·군의 조기집행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재정운용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그 대안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국한된 조기발주를 제한 합니다. 설계 등 내부 준비작업을 서두른다면 어느 정도 조기집행의 효과를 보면서 장미철 이전에 상당부분의 공정을 추진할 수 있으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사고이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출연기관 인사, 합리적이어야”

김중필 의원(산업경제위원회)



출연기관과 사회단체에 근무할 사람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도민으로부터 수입 받은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고도의 윤리성, 도덕성 그리고 봉사성 등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그리고 임기제로 선임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라는 예측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평균적 상식선에서 이해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해 7월 이시종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이루어진 인사가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상식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면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출연재단의 최고 책임자가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직을 하였고, 충청북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 특정 정당 관계자나 개인적 인연을 맺은 사람이 특채나 이사회 추천 방식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체육회 사무처장 임명으로 관련 단체 회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사회 뜻있는 인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책임자의 임기를 정한 것은 업

무 연계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인사는 반칙과 줄서기를 일반화하는 지름길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임용권자나 해택을 입은 당사자는 좋을지 모르나 올바르게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그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 취임하실 때 저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으신 분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소 실망스러움을 느끼며, 이번 같은 인사는 선거의 참뜻을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주창하시는 ‘함께 하는 충북’을 위해서는 도민의 화합이 우선되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보장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인사권 행사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임기간 동안 소통되는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충북의정 | 제209호 23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응기구 구성

충청북도의회는 2월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정상 추진 충북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민·관·정·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 ● 과학벨트 관련 기자회견

도의회는 김형근 의장, 박문희·임한경·이광희 의원이 2월 7일 충청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대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가 실현되도록 기초·광역의회가 연대에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 ● 소방 현안 확인

김형근 의장과 최진섭·손문규 부의장은 1월 26일 청주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현안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 충청도의회, 의정참여단 위촉

도의회는 지난 1월 25일 의정참여단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정참여단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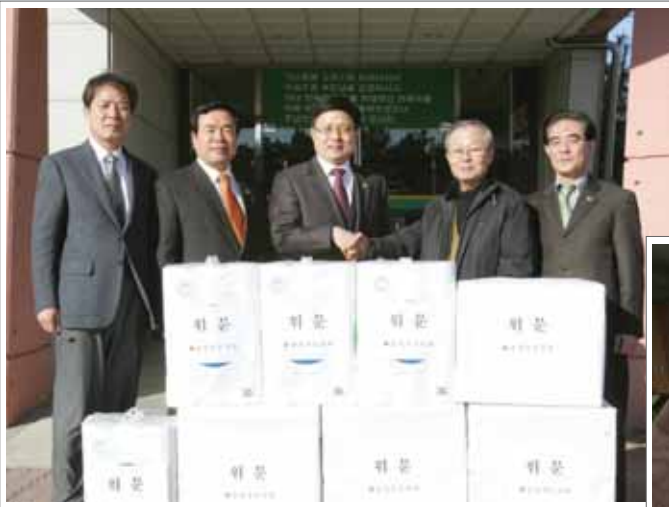


### ● 전체의원 연찬회 실시

도의회는 1월 27일 본회의 종료 후 전체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를 초빙하여 '지역발전정책 최근 추세와 향후대책'이란 주제로 직무 연찬을 했다.



### ● 두꺼비마을신문 어린이기자단 도의회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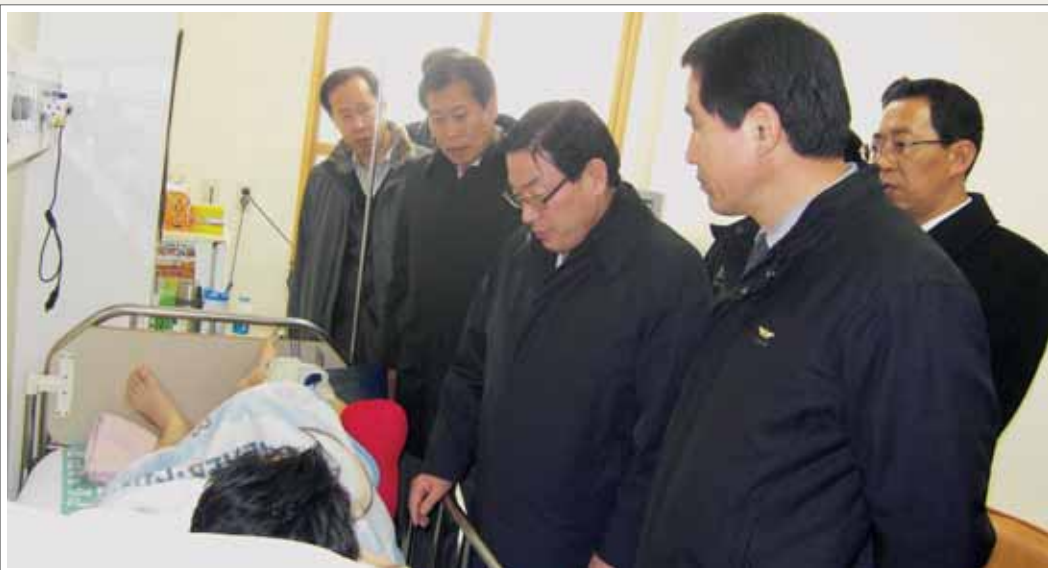
### ● 노인복지요양시설 방문

의장단은 설명절을 맞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소재 '청주소망의 집'을 방문하여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화장지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 ● 구제역 방역 작업 중 부상당한 공무원 위문

김형근 의장과 박문희 운영위원장이 구제역 방역 살처분 작업 중 포크레인 차량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진천군 산림축산과 이철영씨를 위문했다.



### ● 건설소방위원회 부상 소방관 위로·격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 위원들은 화재진압 도중 중상을 입고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청주동부소방서 박석기 소방관을 찾아 위로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박 소방관은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중 건물 붕괴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 봄철 피로증후군 이기는 비법



정진홍원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청주시구 건강증진의원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국 각처에 고개숙인 자가 하나둘씩 생겨난다. 바로 춘곤증의 대공습이 시작된 것이다. 봄철피로증후군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춘곤증은 봄철 환경변화에 인체가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신체반응이라 하겠다. 춘곤증의 정체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늘 바뀌는 계절이고 환절기이지만 특히 봄철이 되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식욕도 떨어지면서 자꾸 졸음이 쏟아져 노곤해지기 일쑤다.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짜증만 나타나니 '무슨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현상은 따뜻해진 외부 환경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으로 춘곤증의 대표적인 징후라 할 수 있다. 어떻게 이겨낼까? 대표적인 춘곤증 증상은 졸음, 식욕부진, 피로감, 소화불량, 현기증 등이 있고 드물게는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 증세까지 보일 수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잠복해 있던 다른 질병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건강한 사람은 이 증세가 1~3주정도 머물다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증세가 지속되는 경우 피로 속에 숨겨진 다른 질병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할 일이 없는 사람은 원인을 반드시 찾아보아야 한다. 피로감을 일으키는 원인질환으로는 불면증, 갑상선기능장애, 만성피로증후군, 빈혈, 우울증 등이 있으며, 간염, 결핵, 당뇨, 악성종양 등의 질환도 피로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춘곤증을 몰아내는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이다. 춘곤증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신체적응의 일시적 혼란상태다. 따라서 빠른 적응을 위해 일반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 7~8시간의 숙면이 필요한데 침실온도를 25℃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식생활 조절도 춘곤증 극복에 꼭 필요하다.

아침은 반드시 먹도록 한다. 아침을 거르면 에너지가 부족해 오전 내내 졸기 십상이다. 점심은 가능한 적게 먹는 것이 좋은데 과식은 뇌로 가는 혈액량, 즉 산소공급량을 줄여 졸음을 부르기 때문이다.

봄이 되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겨울 보다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를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 아침에는 생선, 두부나 콩,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잡곡밥, 봄나물 등의 채소와 신선한 과일 등으로 원기를 회복시켜줄 것을 권한다.

특히 비타민B와 C가 풍부한 봄나물, 과일, 해조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 적당한 운동도 필수적이다. 1주일에 3~5회, 1회 30분~50분씩 달리기, 수영, 자전거타기, 에어로빅 등의 유산소운동을 하도록 한다. 피곤하기 쉬운 봄철에는 과음, 흡연,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절제된 생활을 실천해줘야 한다.



## 명의 빌려줄 경우 영업에 대한 책임은?



**Q:** 저는 친구 甲이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허락하였습니  
다. 그 후 저는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지냈으나 최근에 제3자 乙이 저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甲이 운영하였는데도  
제가 乙이 청구해온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

위 사안은 상법상의 외관존중주의(外觀尊重主義)와 관련된 문제로써 외관존중주의란 거래에 있어서 어떤 사실의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 함은 실제로 상행위를 하는 영업주체를 의미하고 ‘외관’이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명의 즉 상호 또는 상인의 성명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제24조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외관존중주의 내지는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甲과 연대하여 위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진실하지 않은 명의에 의한 영업이 행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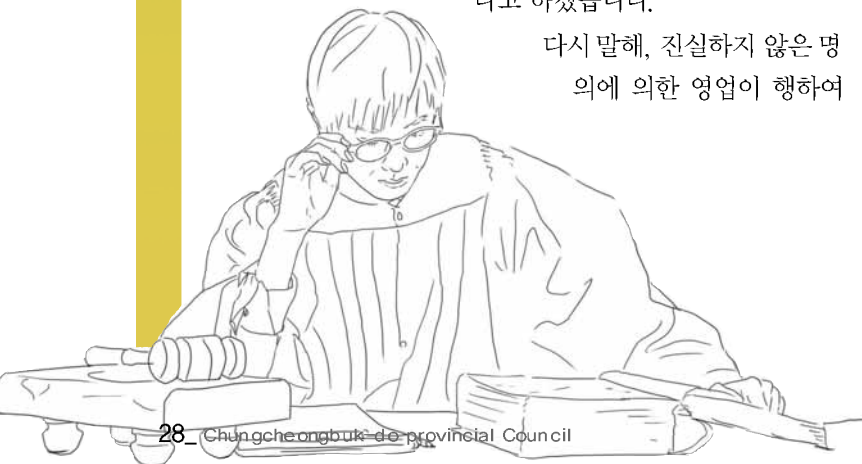
지고 이러한 명의에 대해 그 명의자가 사용허락 등을 통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뢰한 제3자인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따라서 만약 乙이 실질적으로는 甲이 위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고 귀하는 명의만을 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상황이라면 귀하는 乙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소송에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다는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 즉,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명의대여자인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 소득 발생하면 ‘든든 장학금’ 상환해야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 없이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추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제도가 지난 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해부터 든든 학자금을 대출받은 분 중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든든 학자금의 상환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원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

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126이나 학자금 상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cl.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비과세적용자의 허위계약도 세금 납부해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11. 7. 1. 이후 매매계약을 하는 분부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감면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에 따른 관련 세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Up·Down)을 작성해도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 받았지만 올 7월부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상의 거래 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비과세·감면대상 세액에서 차감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도 8년 자경농지 감면 혜택도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일정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제한을 받습니다.

이외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시·군·구에 과태료(취득세 3배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자료제공 : 동청주세무서





김봉희 의원(산업경제위원회)

## “눈물겨운 구제역 사투… 축산업 전화위복 계기 돼야”

지난해 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구제역으로 벌써 300만 마리 이상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 됐다. 다행히 2월 말을 넘어서면서 구제역 발병이 줄어들고 있지만, 완전 종식되기 전까지 희생되는 가축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가축을 애지중지 키워온 축산농민들은 망연자실해 있다. 농촌에서 소를 키워 온 나도 참담하고 가슴 미어지는 나날을 보냈다. 특히 도의회에서 농축산분야를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무겁게 느낀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병하자 곧바로 도와 방역대책을 논의했고 ‘청정 충북’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철저한 방역에 돌입했다. 초기에는 다행히 구제역의 도내 전파를 막았지만, 전국적인 확산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날씨는 왜 그리 추운지. 유난히 길고 추웠던 지난 겨울, 모두가 구제역 방역에 나섰다. 피로에 쌓인 구제역 방역 공무원들의 역할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원들도 자발적으로 방역 초소를 찾았다. 나도 방역초소를 돌면서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탬다. 구제역을 막기 위한 축산농민들과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사투는 참으로 눈물겨웠다.

그러나 방역초소 근무는 그래도 나았다. 감염된 가축이 늘어나면서 일손이 달렸고, 일선 공무원들은조를 편성해 살처분 작업에 나섰다.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힘든 일을 그들은 해냈다. 살처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환청에 시달리거나 식욕부진 등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했다.

이제 구제역의 ‘구’ 자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한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구제역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축사를 휩쓸고 간 구제역이 우리 앞에 던져놓은 과제도 수복하다.

먼저 가축을 문은 매몰지의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매몰지역에서는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지하수와 식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매몰지의 악취 발생도 예상된다. 국가적인 재앙인 구제역이 이제 2차 환경재앙으로 다가올까 두렵다.

충북도의회는 살처분 초기부터 충북도와 매립지 환경문제를 협의하고 2차 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다. 앞으로 매립지 재조사를 거쳐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구제역이 종식되면 그동안의 방역실태 점검과 함께 체계적인 가축 질병 관리 및 예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구제역을 비롯한 각종 가축 질병 방역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 궁극적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육성 대책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구제역을 예방하지 못해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재앙이 되풀이되는 안 된다. 앞으로 축산농가

와 정책당국, 주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전국 유일의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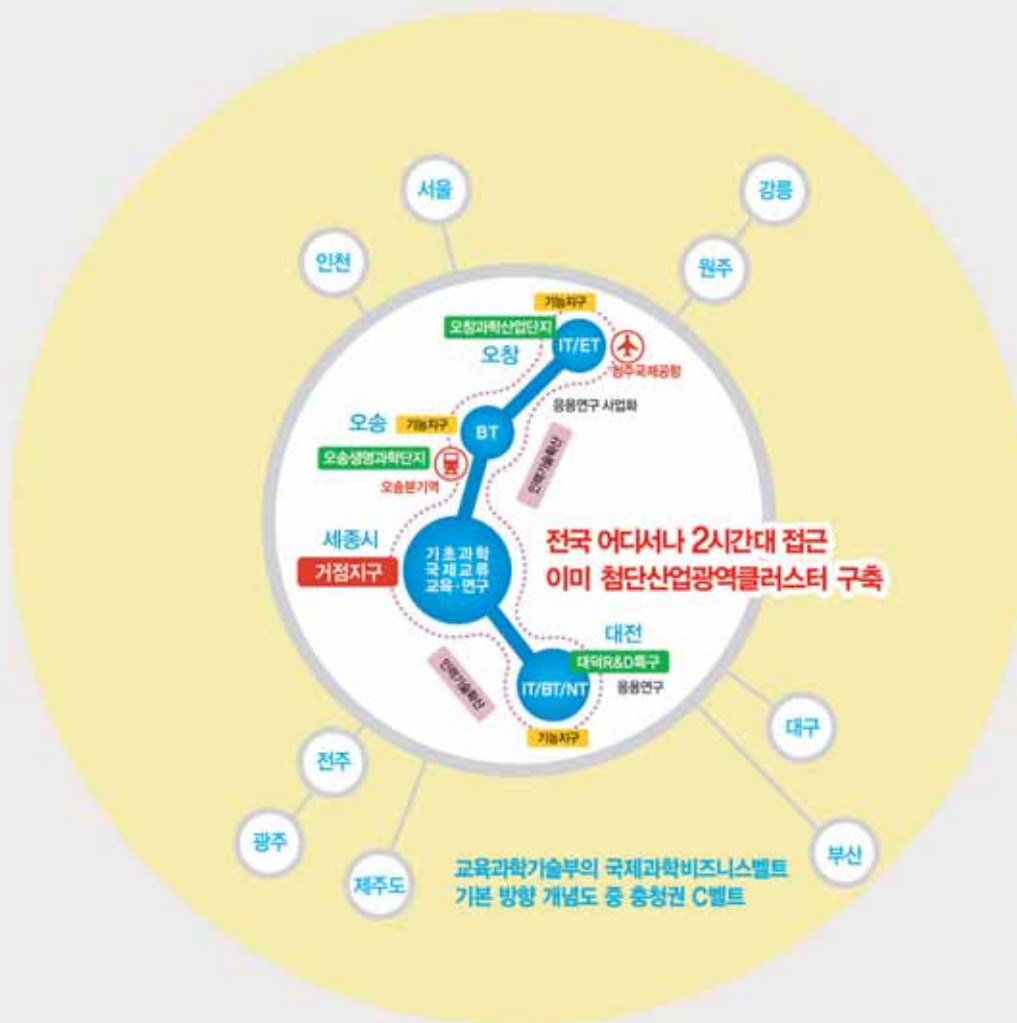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이 해냈습니다



# 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반드시 충청권에만 조성되어야 하는가?

- 첫째. 이명박후보 공약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구축 약속 (17대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34쪽 대전 충남·북편)
- 둘째.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첨단산업 광역클러스터가 구축된 충청권만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최적지라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
- 셋째. 분산조성 기도는 과학거점 형성이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망치는 것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